

“임종석 실장 전남지사 선거 안 나간다”

청와대 “본인이 직접 부인...現 비서실장 출마 쉽겠냐”

文대통령 전남 일정 잇단 동행...타 지역 차출 가능성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설을 부인했다고 청와대가 30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임 비서실장이 (아침 현안점검회의 자리에서) 내년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제각각에서 임 비서실장의 전남지사 출마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부인했다. 지금 임 비서실장이 출마하기가 쉽겠느냐”고 말했다.



대 참모진은 여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출마해야 한다는 등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맞대결을 펼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내부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임 비서실장의 전남지사 출마를 청와대 차원에서 먼저 알린 배경에 대해 “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 가면 임 비서실장의 전남지사 출마 여부를 국민의당 등에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임 비서실장이 지방선거 이후보 자체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다. 현재 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

지사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장기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전남 정총 출신인 임 비서실장이 이 총리를 이어받아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었다.

특히 임 비서실장은 최근 문 대통령의 전남 일정에 잇따라 동행하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란 관측을 낳았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지방 일정으로 청와대를 비우면 임 비서실장은 경내를 지켜왔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를 위해 광주를 방문할 때 기아 유니폼을 입은채 동행하고, 지난 28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임 실장이 전남지사 선거 출마설을 일축함에 따라 당분간 이같은 이야기는 수면 아래로 찾아들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임 실장의 서울 시장 출마설 등 다른 지역 차출 가능성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홍종학 후보자, 잇단 의혹에 ‘곤혹’

딸 재산 편법 증여과정 · 귀족학교 재학 등 논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재산 증여과정을 놓고 편법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귀족학교’라는 주장 등이 나오면서 연이어 꼬여가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14살 중학생 딸이 얼마에게 2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24일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같은 해 2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이율 8.5%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어 12월 31일에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이후 모녀는 같은 해 4월 29일 계약을 연장해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다시 1억1000만원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연이율은 8.5%에서 4.0%로 낮췄지만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급할 이자는 337만원이었다.

모녀는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1000만원을 연이율 4.0%로 빌리기로 해 연말에 이자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총 2억2000만원의 채무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면 이때까지 딸이 얼마에게 지불한 이자비용은 830만원에 달한다.

계약이 만료되면서 딸은 지난 1월 1일 얼마에게 다시 2억2000만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이율 4.0%로 12월 31일에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중학생 딸이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지금의 대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은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홍 후보자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중학생 자녀에게 이 같은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게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홍 후보자의 딸이 이른바 귀족 학교로 알려진 국제중에 재학 중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하위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이 1학년으로 재학 중인 경기도 가평의 청심국제중은 특목고·자사고·과학교 등의 진학률이 80%

를 넘는 특색중학교로 1년 학비만 15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또 이 학교는 국제중으로 잘 알려진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 등에 비해서도 학비가 비싸고 전원 기숙사 생활에 원어인 교사의 비율이 20%가 넘어 상당수의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되는 데다 1인1약기, 양궁 등 고가의 교양수업이 진행된다는 게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자녀를 두고 이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데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스

홍준표 “검찰, 정권 앞잡이에 개관”

“정권실세 눈에 들기 위해 몸부림...보면 암담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요즘 검사들을 보면 의기(薈氣)는 간 데 없고 정권의 앞잡이만 돼 총검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관인 검찰이 됐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같이 말하며 “정권은 한 순간이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의기와 정의에 충만한 검사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진지 오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43분부터 국정원 MBC 담당 직원과 김재철 전 사장 등 당시 MBC 임원진 3명,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는 “1990년 10월말 경 서울 영등포 남부지정 형사8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검사실에서 혼자 3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까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1988년 노랑진 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하며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특수부 4개월 만에 형사8부로 쫓겨난 전

력이 있어 검사장 승진은 못할 것이고 한직인 고검검사를 전전하다가 어느 한직한 시골에 가서 변호사나 하고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러나 나가는 날까지 검사로서 내 입무에는 충실하자고 다짐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눈앞의 출세에 눈이 멀어 한중도 안 되는 정권실세의 눈에 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요즘 검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암담하기 그지없다”며 “바리런 얻는다 라는 단순한 논리도 터득하지 못하고 출세의 탐욕에 허덕이는 후배 검사들을 보면서 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한탄했다.

홍 대표는 “차라리 이럴 비에는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며 “검찰이 대오각성하고 본래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국민-바른, 특별감찰관 개정안 공동발의

내달 2일 기자간담회...야당서 2명 추천 대통령 임명 골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 야당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뉴시스와 만나 “오는 2일 개정안 관련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여당은 지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여당에서 추천하되 야당이 해당 인사에 대해 무제한 비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3명을 정하는데 합의했다. 최종 3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에 특별감찰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기존 회동에서의 합의와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야권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이어온 바 있다. 특별

감찰관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데도 여당이 ‘공백 메우기’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린 그거 해봐야 시간낭비다.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다”며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당과 특별감찰관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 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바른정당과 통합문제는 없다”며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중점 추진 법안이나 예산법안, 청문회 이런 것 가지고 (정책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몽준의법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